



## 법원 판결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저작권 보호'는 없고 '의무재송신 확대'만 있던 재송신 공청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지난달 29일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막상 두걸을 열어 보니 이날 공청회는 지난해 법정에서 판결한 내용들은 완전히 무시한 채, 오로지 유료방송 플랫폼이 주장하는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안)'에만 힘을 실어주도록 기획된 듯 했다.

지난해 법원은 "케이블SO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위는 졸권 "지상파 의무재송신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유료방송 플랫폼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해왔다. 지상

파 방송3사는 그와 관련해 지난 1월 방송위원회 차원에서 "의무재송신 확대는 케이블SO만을 위한 위헌적 시도"이며 "현행법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노기영 교수가 발제한 방통위의 재송신 제도 개선안은 한치도 변하지 않은 방통위의 입장만을 재확인시켜줄 뿐이었다.

이에 대해 지상파 추천 패널로 참여한 인하대 하주용 교수가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지상파와 케이블SO와의 디지털 방송 재송신 거래는) 전적으로 방송시장의 논리에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공청회의는

의는 법원 판결 이전으로 훌쩍 되돌아가 버린 뒤였다.

유료방송 플랫폼 추천의 장선 변호사는 "지상파 재송신은 수신보조행위"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 추천 패널로 참석한 강릉원주대 법학과 고민수 변호사는 "수신보조행위는 유선방송수신관리법상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에게만 해당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해당없다고 법원이 이미 판결했다"며 일축했고, 객석에서는 "SO가 지상파만 재송신하는 무료의 상품이 있느냐"는 빠있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또, 유료방송 플랫폼의 추천으로 참여한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윤석민 교수는 "사업자들이 해결하기 어렵기에 방통위가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며 "당장이라도 의무재송신 확대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방통위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상파 추천의 임상혁 변호사는 "이미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를 존중해야 하며, 자정적으로 방송의 시장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의 월권을 우려했다.

업계 이외에서 추천된 패널들은 '지상파와 유료방송 플랫폼과의 재송신 계약관계'를 '시청자가 지상파를 볼 권리'로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접근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방송학회 추천으로 참여한 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처장의 주장도 거기에 속했다. "지상파 방송이 끊어지고 화질이 떨어지니 난감했다"며 "유료방송 요금이 올라가는 불편을 피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에 공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고민수 교수는 "유료방송 가입자가 지상파를 못본다면 그것은 서비스중계 의무를 충실히 하지 못한 유료방송 플랫폼의 계약불이행이 원인"이며 "방통위가 약정 등 유료방송 플랫폼의 고객 이동성을 제고해야 할 문제"라고 논리적인 오류를 지적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방통위 뉴미디어 정책과 김정원 과장은 "방통위의 개선안이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도록 보안하며, 법원 심리 결과도 반영할 것"이라면서도 "사업자들간의 협상은 계속하되 지상파 재송신은 계속 유지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기본적으로 의무재송신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대해 객석에서는 "(이번 SBS와 스카이라이프의 경우처럼) 계약없이 장기간 재송신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지상파가 거래거절을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COEX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는 음향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Pro-Audio의 '6th Dynamic Blaster KOBA'가 개최되는데, 평소에는 접하기 힘들었던 Line-array Speaker, Amp, Mixer 등 파워풀한 음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KOBA 2011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한국이엔엑스가 공동주최하고,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KBS, MBC, SBS, EBS,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음향학회, 한국음향예술인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 후원한다.

\*KOBA2011 준비작업 및 Daily 발행 관계로 다음호는 6월29일에 발행됩니다.

### Broadcasting & Technique Journal Briefing

[기획] MBC 4·27 재보궐선거 투개표방송

이번 4·27 재보궐선거 투개표방송은 3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1지역 광역단체장 외에도 6곳의 지역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종합선물세트'였다. ▶ 4면

[인터뷰] KBS 관악송신소 양경석 팀장

케이블·위성·IPTV 등 다양한 유료방송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직접 안테나를 설치하고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는 가구는 예전보다 줄었지만, 깨끗하고 뛰어난 품질의 영상을 전달하기 위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노력은 여전하다. 오늘 인터뷰의 기술은 지상파 방송 품질의 마지막을 담당하고 있는 송신소를 찾았다. ▶ 5면

[문보경 칼럼] 미디어법 법안, 6월이 마지막 기회다.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는 30년 가까이 지속된 방송광고판매 독점에 종지부를 찍었다. 지상파 방송광고판매 대형 독점이 헌법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1년을 대체입법시한으로 줬다. ▶ 7면

## KOBA2011, 6월 14~17일 COEX에서 개최

### 전 세계 최첨단 방송·음향·조명 기술이 한자리에

국내 최대의 방송·음향·조명장비 전시회인 KOBA 2011(제21회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전, The 21th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이 '새로운 미디어로, 디지털을 넘어 (To the new Media, Beyond Digital)'를 주제로 다음달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KOBA는 1991년 시작하여 국내 방송문화의 향상과 영상, 음향, 조명산업의 발전을 위

해 꾸준히 개최되어온 국내 유일의 권위있는 방송관련 전시회이다. 올해로 스물한해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서울 삼성동 COEX C, D홀에서 총 17,529sqm규모로 개최되며, KBS, MBC, SBS, EBS 등의 방송사들을 비롯해 국내 방송장비제조사 150개사를 포함한 35개국 700개사가 참가하여 3DTV·스마트TV 등의 차세대 방송서비스와 영상, 음향, 조명산업의 미래를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전시기간 동안 COEX 컨퍼런스센터

에서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의 주관으로 국제방송컨퍼런스가 함께 진행된다.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미디어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방송정책·기술·융합·콘텐츠를 아우르는 약 80여 가지의 강좌에서 폭넓은 지식교류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방송의 디지털 전환, 소셜미디어의 확대, MMS·3DTV·스마트TV·N스크린 등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미래방송기술들에 대한 강의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 최신 핵심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만평

제57화

에나 지금이나...

김성훈



"지상파 방송 의무 재송신 확대 반대"

## [한국방송인총연합회 성명서]

### 방통위는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방침을 철회하라!

'시청자의 권익'을 방패삼아 여론을 선동하는 유료방송 플랫폼들의 망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방통위는 지난 29일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이미 오래 전에 결정해 둔 2가지의 의무재송신 확대(안)를 두고, 마치 자유로운 선택권이라도 준 마냥 능청을 떨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을 압박했다. 또한, 유료방송 플랫폼들은 법원에서 이미 폐기시킨 '수신보조행위'라는 논리를 재탕 삼탕했고, '사익(私益)'을 채우기 위해 '공익(公益)'을 입에 담은 못 할 코미디까지 연출했다. 법과 상식에 근거한 지상파 방송사의 논리적인 주장에 대해 돌아오는 유료방송 플랫폼들의 주장은 '무조건 지상파는 무료'라는 억지외 '시청자의 권익'이라는 손쉬운 방패막이뿐이었다. 논리에 논리로 맞서지 않고, 시청자를 앞세워 억지 섹트집만으로 달려드는 공청회가 과연 공정한가?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는 무료라 주장하면서도 시청자들에게는 그 대가를 고스란히 받아내는 유료방송 플랫폼의 이중적인 행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상파 방송은 직접수신을 통해 국민 모두가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이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채널을 미끼로 수익을 창출하는 유료방송 플랫폼들에게 지상파 방송 콘텐츠는 결코 무료가 아니고, 또 그리 되어서도 안 된다. 이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퍼다 팔라는 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방통위는 지금처럼 사익에 의해 돌아오는 유료방송 플랫폼들을 보호하고자 정작 사회간접자본으로 보호돼야 할 지상파 방송사에게는 끝없는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재송신 계약을 불이행하고 때로는 계약조차 하지 않는 유료방송 플랫폼에게 지상파 신호 송출을 중단하는 정당하고 불가피한 처분마저도 방통위는 강제로 무력화하려고 한다. 계약에 불성실한 방송 사업자로부터 가입자가 이탈하는 당연한 이치를 방통위가 앞장서서 거스르면서 콘텐츠 산업의 큰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에게만 섬뜩한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주객전도(主客顛倒)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방통위에게 묻고 싶다. 방통위는 과연 방송질서를 지키기 위한 기관인가, 아니면, 유료방송의 수익을 지키기 위한 기관인가? 이미 사법기관을 통해 법적인 기준으로 판단 중인 사안에 굳이 개입해서 유료방송 플랫폼의 입장에만 강하게 힘을 실어주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결코 시청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다. 시청자를 방패삼아 자신의 수익을 늘리려는 이들에게 굴복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지상파 재송신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유료방송 플랫폼에게 당장의 단물을 맛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 콘텐츠에 대해 올바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서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데 있다. 유료방송 플랫폼이 주장하는 근시안적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정책은 방송질서를 순식간에 붕괴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노조의 이름으로 '의무재송신 확대 지지성명'을 발표한 '미디어발전협의회'의 행동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그들은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몇몇 회원사의 주장을 마치 전체 언론노동자의 요구인 양 포장하여 기습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그대들의 주장이 옳았다면 왜 언론노조 전체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지 못했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어볼 일이다. 그대들이 주장했던 바가 진정한 방송질서를 위한 것이었는지 지금이라도 돌이켜 보고 속히 언론노동자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